

인구정책 100개·양육비 560억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

전남도 '인구 늘리기' 성과 살펴보니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참 어렵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하소연이다.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머무르게 하고 도시민들이 '생활공간을 옮겨와 정착하고 싶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데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다.

전남도가 올해 내놓은 인구 정책만 100개다. 각 자치단체들은 청년 일자리 마련과 20년 가까이 신생아 양육비만 560억원을 쏟아붓고 최대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는데도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옮겨오는 전입자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한숨을 짓고 있다.

다만, 전남의 속살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도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양식어장에 청년 일자리 마련했는데...외면=전남도가 추진중인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은 젊은층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계 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을 채용하는 양식업체에 시·군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05명을 지원기로 하고 도비만 4억을 확보했지만, 신청자는 고작 6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시·군 지원비와 별도로 1억8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 18명을 뽑으려했지만, 5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양식업체의 호응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결국 전남도는 내년 사업비를 86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젊은 남녀 미팅추선에 양육비 등 지원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

지원자 없어 예산 대폭 삭감

미팅 추선 등 결혼 응원 이벤트

수천만원 출산 장려금 효과 없어

540명 모집 810명 지원 '호응'

'전남서 먼저 살아가기'는 확대

해도...효과는 미지수=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에서 전남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8~40세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련 예산만 1500만원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자연스럽게 전남에서의 정착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지난해에는 1500만원을 들여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남도가 여태껏 추진해온 결혼 응원 프로젝트만 ▲우리만의 작은 결혼식 캠페인(400명) ▲선남선녀 만남 프로젝트(80명) ▲이주여성 결혼식 지원(80명)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 행사만으로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만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 문화도 비슷하다. 전남도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신생아 양육비만 539억여원(19만1749명)에 이른다. 올해도 8001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24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출산 장려금도 엄청나다. 광양·영광·진도의 경우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최고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영광은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 1200만원을 준다. 진도는 셋째부터 2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18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전남지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남 1.24명으로 2015년 1.55명 이후 1.47명→1.33명→1.24명으로 매년 내리막이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도 최저를 찍었다. 지난 한해 전남에서는 1만1238명이 출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93년(2만6912명)에 견줘 58.2%(1만5674명)이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전남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지난해 6.0명으로, 전국 평균 6.4명보다 낮았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는 일단 성과...호응 커 확대기로=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라는 프로그램은 도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내년에는 대폭 확대된다. 전남지역 17개 시·군 30개 마을과 농가에 머물면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애초 모집 대상인 540명을 훌쩍 넘긴 8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도권에서 온 참가자만 46%(369명)에 달했고, 30~40대(31%·253명), 50대 이상(44%·356명) 참여자들도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머무르며 팍파티, 마을 일손돕기, 체험지 둘러보기, 주민과의 간담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4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향후 전남으로 이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재참가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87%나 됐다.

특히 한 차례의 살아가기 체험만으로 수도권 거주자 32명을 비롯한 71명이 전남에 정착하기로 결정, 주소지까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남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전남도는 내년도에는 올해(540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친일 잔재 교가 교체...광주일고 새 교가 발표회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해 온 광주제일고등학교가 19일 오전 교내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교가 발표회를 열고 있다. 제일고는 지난 1월부터 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가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씨가 곡을 붙여 새로운 교가를 완성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WTO 검증절차 마무리

기존 제도 대부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상장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제출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 1시간만에 결렬

양국 수석대표 이례적 장외전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정랑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교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로 알렸

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제적인 제안과(한국 제안이)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